

# “화해와 통합의 큰 뜻 되새기자”

## ■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1주기 맞은 정치권

### 한나라 “소통 강화” 민주 “민주세력 단합”

18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는 ‘화해와 통합’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헌신한 DJ의 삶과 철학이, 일방통행과 이진투구가 횡행하는 정치권에 웃음을 머미고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은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하루가 될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갈등과 반복으로 접철돼 온 정치권이 고인이 남긴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모습을 국민 모두 잊지 못하고 있다”며 “한나라당도 김 전 대통령이 남긴 화해와 통합의 큰 뜻을 마음 깊이 새기며 친서민 소통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고인이 생전에 강조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 등 3대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가슴 속에 아직도 살아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철학과 이념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개혁세력이 단

합해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총체적 위기상황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택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은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던 김 전 대통령의 유언을 국민 모두가 함께 되새기는 날”이라며

“고인의 유지를 계승, 시대 역행의 절망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공과가 분명히 있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일생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정치적 고질적 병폐에서 벗어나 선진화되는 게 유지를 받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심해질수록 고인의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며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유지인 ‘행동하는 양심’을 받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DJ 서거 1주년은 정치권에 민주, 서민경제, 남북평화는 물론 ‘화해와 통합’이라는 화두를 다시 생각토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DJ 서거 1주년을 맞아 철저한 자기반성과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도식에서 이희호 여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비대위 단수신청 지역위원장 105명 승인 의결 광주·전남 18곳 모두 현역의원 선정

민주당 비상대책위는 18일 당 조직강화특별위가 1차로 신청한 단수신청 지역위원장 105명에 대해 승인 의결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복수 신청지역인 광주 남구와 무안·신안을 제외한 18곳 지역위원장에 모두 현역 의원이 선정됐다. 광주 남구는 장병완 의원과 이윤정 현 위원장, 무안·신안은 이윤석 의원과 황호순 지역위원장이 겸임 중이나 현역 의원이 새로운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서울에서는 종로에 손학규 전 대표, 성동을 임종석 전 의원 등 22명, 경기도에서는 안산단원동에 전정배 의원 등 23명, 전북에 9

명, 부산 4명, 대구 4명, 울산과 강원 각 1명, 경북 4명, 충북 5명, 충남 3명 등이 각각 선정됐다.

이 지역의 지역위원장은 지역별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면 최종 확정하게 된다.

비대위는 이날 또 조강특위위원으로 활동하는 양승조 의원이 사임한 자리에 같은 충청지역 출신인 노영민 의원을 선임했으며 강창일 의원과 김민석 전 최고위원 의원의 사임으로 빈 전당대회 준비위원 자리에 장세환 의원과 김성호 전 의원을 각각 대체 선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통일부 통일세 로드맵 작성 착수

### 정치권·민간 전문가 등 참여 태스크포스 꾸려질 듯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화두로 던진 통일세 논의의 앞으로 누가, 어떻게 주도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통일세 준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통일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감론을 벌여 벌어지는 등 통일세 논의는 일단 불이 붙은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도 사회적 논의만 지켜보고는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미 통일세 로드맵 작성에 착수했다.

이중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통일세 논의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사실상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통일세 문제는 전문가나 학계, 국회, 정치권 등 다양한 차원의 논의와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로드맵 작성 과정에서 각계 인사들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정치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일세 논의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쟁취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도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학계, 정치권 등이 참여해 통일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통일세 논의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쟁취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본다”라며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흐르면 그대로 놔둘 수 없으며, 정부가 논의의 물꼬를 트고, 논의의 흐름을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협의를 한번없이 행시 폐지라니...” 한나라 일방통행 당정관계 불만 쏟아져

한나라당 내에서 당정 관계에 대한 불만이 다시 쏟아졌다. 특히 당정 간 사전협의 없이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행정고시 폐지 방침을 놓고 불만이 표출됐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당정관계의 재정립 문제가 지금 거꾸로 간다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 중인데, 잘하면 모르겠으나 거의 민심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렇게 가다가는 정권 재창출은 멀어진다”면서 “당정관계를 반드시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 하에 장관에 대한 평가를 당에서 실시, 공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당정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동감을 나타냈다.

중진인 친박계 이해봉 의원은 “(정부가) 집권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근

래 심화하고 있다”며 “국회 경시, 집권여당 무시의 행태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완전히 회귀했다”고 가세했다. 8·8개각에 대해서도 “친이(친이명박)계 간 소통에 불과하다는 게 언론과 국민의 시각”이라며 “늘 함께 가자고 해놓고 가만히 보면 혼자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 당정협의를 없이 발표된 정부의 행정고시 폐지안으로 쏟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두언 최고위원은 “서민 자제에게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치워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관 음식 제도의 부활, 계층 재생산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혹평했다. 그는 특히 “개인적 스펙은 부유층에게 유리하므로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문호를 축소할 것”이라며 “학벌, 집안 배경, 연줄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공무원 특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시의회 옛 도청 별관 보존방식 간담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를 관련해 광주시의회와 ‘5·18 사적지 원형 보존을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 대책위원회’(이하 시·도민 대책위)가 18일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논의했다.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광주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 의정실에서 간담회 전남대교수와 유봉식 광주·전남 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등 시·도민 대책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 부분보존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도민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사성이 큰 옛 전남도청 별관을 원형보존해야 한다고 광주시의회가 입장을 함께해 달라

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또 광주 5·18 민주항쟁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옛 도청의 원형보존만이 광주 정신에 맞는다며 원형보존을 강조했다.

이춘문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건물을 원형보존을 끝까지 고집하면 일을 진전시킬 수 없다”며 “5·18 정신을 기억하고 역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원형보존도 좋지만, 기념비 건립 등 창조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장은 “광주시의회가 각계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26명의 의원과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이고, 가급적 합의의 정신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발 멈추기만 해도 평귀요**

마이비밀

**마이비밀 임상결과**

마이비밀